

勞使關係에 대한 國民意識 調查研究*

洪斗承** · 金起煥 · 金秉祖***

<목 차>	
I. 序 論	1. 노사분규의 원인
1. 연구의 개요	2. 근로조건과 근로자복지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무노동 무임금'
II. 勞動問題에 대한 關心과 認知	4. '제 3자 개입'
1.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V. 勞動組合의 활동
2.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	1.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
3. 노동문제의 위상	2. 노동조합활동의 영향
4. 노사갈등의 배경에 대한 인식	3.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5. 근로자의 사회적 기여도와 경제적 보상	VI. 政府의 政策과 勞使關係의 未來
III. 勞使紛糾에 대한 평가	1. 정부의 노동정책
1. 근로자의 집단행동	2. 노사관계의 전망
2. 노사분규와 국민생활	VII. 요약 및 결론
IV. 勞使紛糾의 原因과 爭點들	

I. 서 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대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관행이 존속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987년 여름을 전환점으로 하여 저임금과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 본 연구는 韓國勞動研究院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준 사회학과 金佑埴, 趙正熙, 韓準석사에게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만으로는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결과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바로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사회발전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한 노동문제 및 노사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노사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존중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산업현장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대한 연구에 뭇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갈등과 분규가 일반국민들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절대빈곤의 절박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청후세대가 인구구성에 있어서 다수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참여, 사회적 형평, 경제적 복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기대와 욕구의 상승은 산업 현장의 범위를 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도시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치적・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욕구분출은 이해당사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원만하게 제도적으로 흡수・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문제시된다. 따라서 노동문제와 노사갈등은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 노사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이 감지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 과 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의 반응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조사연구는 국민의 눈에 반영된 오늘의 노사관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1-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차후 연구에서 비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연구방법

표본조사는 1989년 1월 현재 전국 6개의 특별시·직할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의 도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의 성격, 예산범위 및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1,500명으로 정하였다. 표집은 전국에서 162개의 표집단위를 선정한 다음, 각 표집단위별로 7-10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집은 다단계 확률표집으로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의 표집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단계에서는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8개도의 시부 및 군부 등 24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시의 유권자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의 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특별시·직할시와 도의 시부에서는 동을, 그리고 도의 군부에서는 읍·면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에서는 통·반을, 군부의 읍과 면에서는 리를 선정하였다. 확률표집방법에 의한 최종 표집단위인 통과 리에서는 성 및 연령에 근거한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방법을 채택하였다. 할당표집의 기준으로는 성비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6:4로 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지역과 성에 따라 연령분포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성별로 연령의 중앙값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값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각각 반반씩 표집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1989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방식은 면접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문항내용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기기입방식도 병행하였다. 면접원은 전국 13개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사과정 학생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총 1,500매의 질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후 부실한 질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시키고,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속성(할당기준대로)을 가진 조사구내의 다른 사람을 조사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문지 검토, 편집, 코딩을 거친 후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VAX-11/780 시스템에서 SPSS-X 패키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시 각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

학적, 사회경제적 속성과 주관적 의식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용된 기본적인 독립변수와 그 범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 : 남자와 여자
- 2) 연령 : 20세부터 10세 단위로 끊었고, 60세 이상은 하나의 범주로 하였다.
- 3) 교육수준 : <국민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초급대학>, <4년제대학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급 학교 중퇴자는 졸업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 4) 가구소득 : 한 가구의 성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보다는 그 가구 전체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여 가구소득을 소득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은 <20만원 미만>, <20~29만원>, <30~39만원>, <40~59만원>, <60~89만원>, <90~119만원>, <120만원 이상> 등 7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 5) 직업 :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자영업주>, <생산·기능직>, <노동·행상>, <독립자영농>, <영세·소작농>, <주부>, <학생>, <기타> 등 10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전문·관리직은 고위전문직, 고위행정직, 고위관리직 종사자를 가리키며, 사무직에는 일반사무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위직이 아닌 일반전문직,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판매·서비스직 근로자(피고용)는 생산·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 6) 계층 : 계층분류는 洪斗承의 분류방식을 따랐다.⁽¹⁾ 여기서 응답자가 경제활동인구일 경우에는 응답자의 직업을 기초로 계층을 구분하였고, 응답자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무직 등)일 때, 세대주가 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직업으로 계층을 정하나, 세대주도 비경제활동인구일 때에는 계층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 7) 상대적 박탈감 : 자신의 노력에 비해 그 경제적 대가(소득이나 경제형편) 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경제적

(1) 洪斗承,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권 3호, 1983. pp. 69-87.

대가가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또는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하>로, <낮은 편이다>는 <중>으로, 그리고 <매우 낮다>는 <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본 연구에서 사전에 할당한대로 남녀의 비율이 6:4를 이루었다. 연령의 경우, 본 조사에서는 각 지역과 성에 따라 연령의 중간값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가 절반씩 되도록 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연령별 분포를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가 전체 성인인구의 구성과 성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로 가중치를 주어 그 분포를 가중치를 주지 않은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전체의 38.3%이고, 고등학교 이상이 나머지 61.7%가 된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을 측정한 것으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부터 얻어진 수입도 포함시켰다. 가족 중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1인인 경우가 55.9%, 2인이 33.7%, 그리고 3인 이상인 경우도 9.5%나 되어 응답자의 개인소득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가 농업에 종사할 경우, 가구의 1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59만원대가 2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0~89만원(18.9%), 30~39만원(18.5%)으로, 전체응답자의 63.2%가 30~89만원의 범위에 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일범주로는 주부가 가장 많고(24.4%), 그 다음이 사무직(18.6%), 자영업주(14.7%) 등의 순이다. 직업범주에는 주부, 학생, 무직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계층별 분포를 보면,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로 주로 이루어지는 중상계층이 2.7%, 사무직, 하위전문·관리직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근로자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500)

변수	항 목	%(N)	변수	항 목	%(N)
성 별	남 자	60.0 (900)	직	전문·관리적	1.5 (23)
	여 자	40.0 (600)		사무적	18.6 (279)
연 령	20~29세	24.1 (362)	업	자영업주	14.7 (221)
	30~39세	35.7 (536)		생산적 등	12.1 (181)
교 육 수 준	40~49세	19.8 (297)		노동·행상	4.9 (73)
	50~59세	15.5 (233)		자영농	12.5 (187)
	60세 이상	4.8 (72)		영세·소작농	6.1 (91)
	국민학교 이하	18.4 (276)		주 부	24.4 (366)
	중학교	19.9 (299)		학 생	2.3 (34)
	고등학교	35.6 (534)		기 타	3.0 (45)
	초급·전문대학	7.7 (115)	계	중상계층	2.7 (40)
	대학교 이상	18.4 (276)		신중간계층	26.2 (384)
	20만원 미만	8.0 (120)		구중간계층	20.2 (296)
월 평 균 가 구 수 특	20~29만원	9.8 (147)	층	근로계층	16.9 (247)
	30~39만원	18.5 (276)		도시하류층	6.1 (89)
	40~59만원	25.8 (385)		자영농층	19.6 (287)
	60~89만원	18.9 (283)		영세·소작농층	8.3 (121)
	90~119만원	10.6 (158)	지	서 울	25.3 (380)
	120 만원 이상	8.4 (125)		경 기	16.9 (253)
지 역 크 기	서 울	25.3 (380)	역	강 원	4.1 (61)
	대 도 시	21.7 (325)		충 청	10.3 (155)
	중소도시	21.0 (315)		호 남	13.5 (203)
	읍	5.7 (85)		영 남	29.9 (448)
	면	26.3 (395)			

인 신중간계층이 26.2%, 자영상인, 자영제조·기능·서비스업주 등 자영업 주로 이루어지는 구중간계층이 20.2%, 생산·기능직근로자, 판매·서비스 직 근로자 등 근로계층이 16.9%, 노점·행상·막노동자 등 도시하류계층이 6.1%, 그리고 자영농·소작농 등 농어민층이 27.9%를 이루고 있다(〈표 1〉 참조).

II.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지

1.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한국의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1987년은 하나의 새로운

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에 6월 29일에서 10월 31일까지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3,311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 수는 1,225,830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²⁾

양적 규모에 있어 폭발적일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1987년 3/4분기의 노사분규는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노사분규의 발생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총 분규수 3,311건 중에서 전통적으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해왔던 운수·창고업, 제조업, 광업 등에서 각기 1,005건, 635건, 79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전에는 노사분규의 안정지대로 간주되어 왔던 도소매업, 서어비스업, 금융업 등에서도 각기 35건, 30건, 29건의 분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노사분규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발생되고, 직종별로도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이나, 판매·서어비스직 근로자들에게도 노사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2,556건이 발생하고,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사업체에서 755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중심의 분규였으나, 규모별 사업체수에 비교해보면 대기업에서의 분규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분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분규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과급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의 공단지역에서의 분규가 총 분규 중에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 123건, 전라남도에서 101건, 제주도에서도 3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전국에 걸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29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폭발적인 노사분규가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노사분규의 양적·질적 변화추세는 1988년에도 지속되었다. 1988년은 노사분규 총발생건수가 1,873건으로 1987년의 3,749건에 비하면 감소된 것이다, 1986년까지의 노사분규에 비하면 8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운수업, 광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이 노사분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1987년의 7.8%에서 1988년에는 11.6%

(2) 노동부,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 1988.

로 증가하고, 규모별로는 여전히 대기업에서의 분규발생율이 높다.⁽³⁾ 따라서 노사분규는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사분규, 그리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서 본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조사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노사분규, 노동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사분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2년 사이 신문, 방송에 노사분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귀하는 이러한 노사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2%가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5.3%가 ‘약간의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가지 응답을 합치면 86.5%인데 이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사문제에 대한 조사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13.4%는 노동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하고 있어 국민중에서 일부는 노사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앞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노동문제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중에서 어떠한 집단이 노동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하위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점을 이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동문제에 무관심한 층은 어떠한 층인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성과 연령별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노사분규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노동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에 응답한 남자가 51.7%인데 반하여 여자는 그 반에 불과한 25.5%이며, 반대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남자는 7.6%에 불과하지만 여자

(3) 이원덕·유경준, “국내노사관계동향 및 전망”, 『노동동향분석』, 1권 1호. (1988), pp.50-55.

는 22.2%에 이르러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본 〈표 2〉를 보면, 연령집단별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41.7%이고, 30대의 경우에는 45.5%인데, 40대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60세 이상에 이르면 28.2%로 줄어든다. 반대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10%미만이나, 그 비율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60세이상의 경우에는 25.4%가 노동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한다.

이상에서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젊은 남자와 나이가 많은 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즉, 교육, 가구소득, 직업 등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수준별로 나누어본 〈표 3〉은 교

〈표 2〉 연령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연 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상
많은 관심	41.7	45.5	39.4	36.9	28.2
약간의 관심	51.1	44.6	42.4	41.6	46.5
무 관심	7.2	9.9	18.2	21.5	25.4
계 (N)	100.0 (362)	100.0 (536)	100.0 (297)	100.0 (233)	100.0 (71)
통계 값	$\chi^2=49.9$, df=8, p<0.001				

〈표 3〉 교육수준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교 육 수 준				
	국민학교이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문·초급대학	대학 이 상
많은 관심	28.7	34.8	43.6	44.3	54.7
약간의 관심	42.9	46.5	47.4	51.3	40.2
무 관심	28.4	18.7	9.0	4.3	5.1
계 (N)	100.0 (275)	100.0 (299)	100.0 (534)	100.0 (115)	100.0 (276)
통계 값	$\chi^2=111.4$, df=8, p<0.001				

육수준과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고(54.7%), 국민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한편 노동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보다 빈번히 나타난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낮은 소득수준에서 무관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교육수준이 또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가구소득차체가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도를 결정짓는다기보다는, 소득이 교육수준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표 4〉를 보면,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는 노동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사람이 78.3%에 이르고, 반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이들 직업집단이 노동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산·서비스·판매직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50% 이상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노동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문제의 직접당사자라 할 수 없는 자영업주나 노동·행상,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이보다 낮아져서 ‘관심을

〈표 4〉 직업집단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직업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계 (N)
	많은 관심	약간의 관심	무관심	
전문·관리직	78.3	21.7	0.0	100.0(23)
사무직	50.2	45.5	4.3	100.0(279)
자영업주	43.0	46.2	10.9	100.0(221)
생산직 등	53.0	38.7	8.3	100.0(181)
노동·행상	39.7	41.1	19.2	100.0(73)
자영농	42.5	46.2	11.3	100.0(186)
영세·소작농	42.9	37.4	19.8	100.0(91)
주부	24.0	52.5	23.5	100.0(366)
학생	47.1	41.2	11.8	100.0(34)
기타	40.0	44.4	15.6	100.0(45)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들 직업집단을 비교하면,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무관심의 비율은 노동·행상이나 영세·소작농에서 높다. 한편, 노사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장 적게 표명한 층은 주부인데, 주부의 기본적인 활동영역이 가정에 국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일상생활과 비교적 관계가 먼 노동문제에 대해서 다른 직업집단보다 관심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끝으로 계층별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표 5>에서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계층은 중상계층이며 그 다음이 근로계층과 신중간계층이다. 반대로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어민층, 도시하류층 등에서 특히 많이 보인다.

<표 5> 계층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 %)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계						총
	중 상	신중간	구중간	근 로	도시하류	자영농	
많은 관심	52.5	43.8	38.5	48.6	36.0	35.0	41.3
약간의 관심	35.0	49.2	48.6	41.3	44.9	45.5	38.8
무 관심	12.5	7.0	12.8	10.1	19.1	19.6	19.8
계 (N)	100.0 (40)	100.0 (384)	100.0 (296)	100.0 (247)	100.0 (89)	100.0 (286)	100.0 (121)

이상에서 개별적 배경변수별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젊은 층에서, 그리고 노사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층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거나, 노동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제활동을 하는 층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2.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

앞의 논의에서 전반적으로 보아 국민들이 노사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일반국민들은 노사문제에 관하여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국민들의 의식조사로부터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국민들이 노사분규의 실제

사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최근에 일어난 노동문제와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귀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다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하는 질문을 던져서 얻어낸 응답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 (단위 : %, N=1,500)

노사분규 사례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조금은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현대그룹 노조원 집단폭행사건	44.8	47.5	7.4	0.3	100.0
서울지하철 파업	27.5	54.7	17.6	0.2	100.0
대우조선 파업	22.1	60.1	17.6	0.3	100.0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10.3	43.8	45.3	0.6	100.0

〈표 6〉을 보면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와 ‘조금은 알고 있다’를 합하여 적계는 8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노사분규나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를 비교하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 ‘현대그룹 노조원 집단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라는 대답이 44.8%이고,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47.5%로 전체의 92.3%가 알고 있는 반면에, 시기적으로 다소 오래된 ‘서울지하철 파업’이나, ‘대우조선 파업’의 경우에는 그 인지도가 떨어져서 ‘전혀 모른다’는 대답도 각각 17.6%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가 10.3%, ‘조금은 알고 있다’가 43.8%인 반면에, ‘전혀 모른다’도 45.3%나 된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들이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보다 최근의 사건일수록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에 대해 그 인지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인데, 이는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이 다른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어온 테 반하여 다른 사건들은 돌발적이거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취급된 문제들이다.

이어서 어느 집단이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어느 집단이 인지도가 낮은가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 25점을 부여하고, ‘조금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 12.5점을, ‘전혀 모른다’이면 0점을 부여한 다음, 네가지 사건에 대한 그 점수를 합하여 개인의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 점수로 삼았다. 그렇게 되면 4 가지 사건 모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00점을 얻게되고, 모든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0점을 얻게 될 것이다.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4가지 사건에 대한 인지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 간적 추이에 따른 망각곡선이 개개인마다 크게 틀릴 것이므로 개인적인 편 차가 갖는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특정 사건과 남다른 관계가 있을 가능성성이 있는데, 이 효과도 마찬 가지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지도 점수가 하위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부표 1>에 나타나 있다.

<부표 1>에서 총 평균 52.67은 응답자 전체의 평균인지도가 52.67이라는 것이고, 이는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를 100점 만점으로 할 때, 국민들의 인지정도는 대체로 중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볼 때,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이다. 그 중에서 성 및 교육수준은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은 1% 수준에서 유의하다. 국민들의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는 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40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학력 일수록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또한, 월평균가구소득도 인지도와 비례한다. 이상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서로간에 어느정도 연관성있는 결과라 하겠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직업집단과 계층별 인지도의 차이도 살펴 볼 만하다. 교육, 소득 및 직업의 상관을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대체로 교육과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사분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부들의 인지도가 낮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중상계층과 신중간계층이 인지도가 높으며, 구중간계층과 근로계층이 전체의 평균과 비슷하고, 도시하류층, 자영농층이 낮고, 영세·소작농층이 노사분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분석과정에서 네가지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인지도를 계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수치상으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한 인지도와 전체사건에 대한 인지도의 유형이 같았다는 점이다.

3. 노동문제의 위상

앞에서 우리는 여러 노사분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노사분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타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비교함으로써 노동문제의 위상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표 7〉은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다음의 문제들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선별적으로 제시된 사회문제가 모든 사회문제를 망라한 것도 아니고, 또한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회문제를 선정한 것도 아니다. 단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집들 중 비교적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뽑아낸 것임을 밝혀두고자

〈표 7〉 제반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단위 : % (N=1,500)

사회문제 영역	응답 범주				계
	아주 심각하다	조금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범죄	90.5	8.2	0.9	0.3	100.0
빈부격차	66.8	28.7	3.9	0.6	100.0
물가상승	58.5	36.7	4.3	0.5	100.0
주택문제	54.1	38.9	6.1	0.9	100.0
학생시위	38.7	42.9	17.5	0.8	100.0
노사분규	37.1	54.1	7.7	1.1	100.0

한다.

〈표 7〉을 보면 노사분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7.1%, ‘조금 심각하다’는 응답이 54.1%,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7.7%, 그리고 무응답이 1.1%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노사분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제로서의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는, 여타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평가와 견주어 보면, 아직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식속에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만을 살펴보면, 노사분규에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7.1%인데 반하여, 범죄에 대해서는 90.5%가,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66.8%가,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58.5%가,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54.1%가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학생시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38.7%로 노사분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날 뿐, 여타의 사회문제들에 비해서 노사분규의 심각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사분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고 설불리 결론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시위를 제외한 여타의 사회문제와 비교하여 노사분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볼 때, ‘노사분규’는 국민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죄, 빈부격차, 물가상승, 주택문제 등은 국민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노사분규는 분규당사자들에게 조차도 매일같이 직면하는 항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타의 사회문제는 국민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문제인데 반하여, 노사분규는 그 영향력이 전국적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노사관계의 틀속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분규에 관계되는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명확하다. 세째로, 여타의 사회문제는 일년중 언제라도 ‘항상’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데 반하여, 노사분규는 일년중 비교적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다.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문제로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는 임금인상협상이 진행되는 3월이나 9월을 중심으로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시점은 설날(구정)을 1주일 남짓 앞둔 1월 말이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라는 문제가 조사대상자들에게 특별히 부각되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분규의 심각성은 다른 사회문제와 비교를 통해서 심각성을 논하기보다는 노사분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은 시기에 90% 정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분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여러가지 변수로 나눈 하위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사분규 및 노동문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분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노사갈등의 배경에 대한 인식

노동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인 근로자와 기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다. 노사간의 문제는 장차 우리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영역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노사간의 갈등 또는 거리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와 경영자들이 각각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또는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틀이 파괴되면서 근로자와 기업가간에 갈등과 거리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노사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나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근로자와 기업가간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아주 크다’고 대답한 사람이 26.5%, 그리고 ‘큰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3.1%나 된다. 둘을 합해 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전체 국민의 9할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

〈표 8〉 근로자와 기업가의 갈등·거리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위 : %)

응답범주	조사시기		
	1986년 12월*	1987년 11월**	1989년 1월
아주 크다	21.8	32.2	26.5
큰 편이다	45.8	47.9	63.1
그저 그렇다	22.3	14.5	—
작은 편이다	7.7	4.3	8.7
아주 작다	1.9	0.9	0.4
무응답	0.5	0.2	1.4
계 (N)	100.0 (1,182)	100.0 (1,493)	100.0 (1,500)

* 한국일보사, 「전환기의 한국사회—국민의식조사자료집」, 1987.2.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 발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1987. 11.

로자와 기업가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작다고 대답한 사람은 '작은 편이다'와 '아주 작다'를 합하여 10%미만이다. 이를 최근에 실시된 다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8〉에 함께 제시된 1986년 12월의 조사와 1987년 12월의 조사도 이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범주 중 '그저 그렇다'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다른 조사들과 적절적인 비교가 곤란하지만, 대체로 보아 노사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가 하위집단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아주 작다'에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0.4%에 지나지 않으므로 '작은 편이다'에

〈표 9〉 연령별 근로자와 기업가의 갈등·거리감에 대한 인식 (단위 : %)

노사간의 갈등 과 거리감	연 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상
아주 크다	34.4	28.2	20.6	22.4	17.6
큰 편이다	58.6	63.3	70.8	65.4	63.2
작다	6.9	8.5	8.6	12.3	19.1
계 (N)	100.0 (360)	100.0 (532)	100.0 (291)	100.0 (228)	100.0 (68)
통계값	$\chi^2=32.0$, df=8, p<0.001				

포함하였다. 하위집단별로 볼 때 성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계층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보였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노사갈등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표 9〉). 교육수준도 높을수록 노사갈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가,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5. 근로자의 사회적 기여도와 경제적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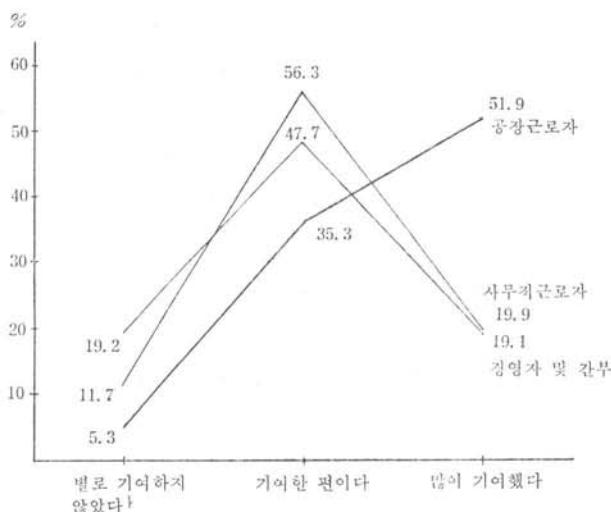
(1)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우리 사회의 근로자와 경영자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내의 경영자 및 간부, 공장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들 세 집단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공장근로자였고 이어서 사무직 근로자, 경영자 및 간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근로자에 대해서는 ‘많이 기여했다’가 51.9%, ‘기여한 편이다’가 3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전체응답자의 87.2%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공장근로자들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76.2%, 경영자 및 간부의 경우는 66.6%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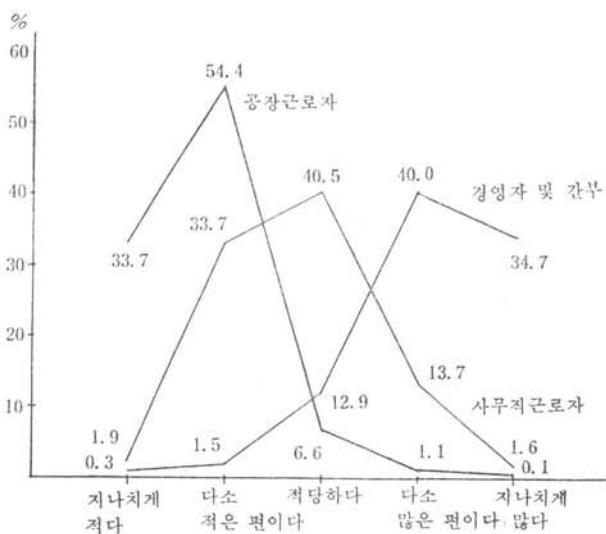
(2)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

이어서 이들 각각의 집단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보상의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현재 이들의 보수(월급 등)가 어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위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자 및 간부의 경우에 그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다소’ 많다고 본 응답이 전체의 74.7%에 달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여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공장근로자의 경우에는 89.1%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들의 보수가 ‘다소’ 적거나 ‘지나치게’ 적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공장근로자들은 사회발전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응답자들에



〈그림 1〉 직위별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그림 2〉 직위별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대의 논리로서 경영자 및 간부들은 근로자들보다는 그 기여도가 높지 못함에도 경제적 보상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다.

(3)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평가

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근로자들은 기업가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해 보았다. 전체응답자 중에서 근로자들이 기업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27.0%에 지나지 않는 반면, 71.5%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근로자들의 사회적 기여도 및 경제적 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에 다루게 될 노사분규의 원인,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상당부분 기여해 온 근로자들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그 결과로서 노사분규가 빈

〈표 10〉 연령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평가 (단위 : %)

근로자의 처우 에 대한 평가	연 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상
정 당	19.4	25.2	34.2	31.7	42.6
대체로 부당	70.0	68.4	60.6	63.9	45.6
아주 부당	10.6	6.4	5.1	4.4	11.8
계 (N)	100.0 (360)	100.0 (531)	100.0 (292)	100.0 (227)	100.0 (68)
통 계 값	$\chi^2=41.0$, df=8, p<0.001				

〈표 11〉 교육수준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평가 (단위 : %)

근로자의 처우 에 대한 평가	교 육 수 준				
	국민학교이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문 · 초급 대학	대학교 이상
정 당	30.3	33.3	28.5	20.0	19.1
대체로 부당	63.3	61.3	64.9	70.4	71.3
아주 부당	6.4	5.4	6.6	9.6	9.6
계 (N)	100.0 (264)	100.0 (297)	100.0 (530)	100.0 (115)	100.0 (272)
통 계 값	$\chi^2=21.7$, df=8, p<0.01				

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본다. 응답법주에서 '아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에 응답한 사람은 매우 적으므로 이를 '대체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에 포함하여 '정당한 대우'로 포괄하였다. 하위집단별로 볼 때 성별이나 소득, 계층에 따라서는 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현재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거나 고령인 응답자들중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난다(〈표 10〉, 〈표 11〉). 직업별로는 학생, 생산·판매·서비스적 근로자, 자영농, 사무직종사자의 순으로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와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계층별로 보면, 중상계층과 구중간계층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III.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

1. 근로자의 집단행동

노사분규시에 나타나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먼저 국민들이 근로자들의 요구내용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한다.

근로자의 요구내용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의 10.9%가 '아주 정당하다', 56.1%가 '정당한 편이다'라고 평가하여 응답자의 2/3가 근로자의 요구내용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 정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요구내용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다'가 12.2%나 되고, '과격한 편이다'라는 평가도 69.5%에 이른다. 이 결과는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해서 전체응답자의 8할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에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하여 '온건한 편이다'라고 평가한 사람

〈표 12〉 연령별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 (단위 : %)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	연 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상
아주 과격	5.6	10.5	15.4	19.7	23.9
과격한 편	68.8	71.8	71.6	67.7	69.0
온전	25.6	17.7	13.0	12.7	7.0
계 (N)	100.0 (359)	100.0 (532)	100.0 (292)	100.0 (229)	100.0 (71)
통계값	$\chi^2=59.8$, df=8, p<0.001				

〈표 13〉 교육수준별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 (단위 : %)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	교 육 수 준				
	국민학교 이하	중 학 교	고등학교	전문·초급 대학	대학 상
아주 과격	22.1	12.2	10.0	8.8	8.7
과격한 편	59.8	69.8	71.6	78.1	75.3
온전	18.1	18.0	18.4	13.2	16.0
계 (N)	100.0 (271)	100.0 (295)	100.0 (528)	100.0 (114)	100.0 (275)
통계값	$\chi^2=35.7$, df=8, p<0.001				

은 16.6%, ‘아주 온전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0.6%에 불과하다. (하위집단별 근로자의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는 〈표 12〉, 〈표 13〉 참조).

이상의 연관된 두 가지 질문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요구내용은 정당하나, 행동은 과격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싶다. 물론 근로자의 요구내용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의 비율보다 행동의 과격성을 지적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리 옳고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그 요구가 보다 온전한 행동방식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강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의 요구내용이 정당하고, 행동방식도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편의상 ‘친근로자적’이라고 하고, 요구내용은 정당하나 행동방식은 과격하다는 사람을 ‘중간적’이라 하며, 요구내용도 지나치고, 행동방식도 과격하다는 사람을 ‘반근로자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구내용은 지나치나, 행동방식은 온전하다는 사람이 20명 남짓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

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친근로자적’, ‘중간적’, ‘반근로자적’로 나뉘어지는 성향을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라는 변수로 이용하면, 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과 무응답을 제외한 1,452명 중에서 ‘친근로자적’인 사람이 16.2%, ‘중간적’인 사람이 51.9%, 그리고 ‘반근로자적’인 사람이 31.9%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들의 반 정도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중에서 2/3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1/3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되어 국민들이 근로자들의 행동방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노동쟁의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적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2%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34.1%이며, ‘사회불안의 요인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7.8%이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측과 집단행동은 사회불안의 요인이므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위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0.1%와 43.9%로 다수의견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필수적이라거나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허용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본 〈표 14〉를 보면, 연령별 차이는 성별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58.0%와 55.4%로 응답범주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미해서, 40대이상 부터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응답중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표 14〉 연령별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단위 : %)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상
필수적이다	16.6	7.9	10.5	7.0	5.6
불가피하다	58.0	55.4	38.9	31.0	26.8
자제되어야 한다	23.2	30.7	39.9	47.2	52.1
제거되어야 한다	2.2	6.0	10.8	14.8	15.5
계 (N)	100.0 (362)	100.0 (534)	100.0 (296)	100.0 (229)	100.0 (71)
통 계 값	$\chi^2=135.8$, df=12, p<0.001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다’라는 사람의 비율과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다. 젊을수록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더 허용적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젊은 층과 노년층의 평가는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도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표 15〉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는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즉 국민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가장 많고,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1.0%인데 반해, 대학교육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26.5%에 불과하지만 ‘불가피하다’는 59.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집단행동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서 국졸이하자의 경우 16.6%나 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선적으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평가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초급·전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집단행동에 약간 더 허용적이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직업집단별로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다’라고 적극적인 찬동을 보인 사람의 비율은, 학생 23.5%, 생산직 근로자 14.9%, 자영농 14.0%, 영세농 13.3%의 순이다. 농민층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필수적이다’라고 표명한 사람의 비율이 의외로 높은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농산물

〈표 15〉 교육수준별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단위 : %)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교육수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초급학	대학교 이상
필수적이다	9.6	9.4	10.3	13.9	10.2
불가피하다	31.0	40.9	50.8	60.9	59.6
자제되어야 한다	42.8	40.3	32.6	24.3	26.5
제거되어야 한다	16.6	9.4	6.2	0.9	3.6
계 (N)	100.0 (271)	100.0 (298)	100.0 (533)	100.0 (115)	100.0 (275)
통계값	$\chi^2=94.1$, df=12, p<0.001				

가격을 중심으로 한 농민의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즈음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중에서 영세·소작농은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의식의 양분상황을 보여준다. 사무직과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들은 70% 정도가 필수적이라거나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여 근로자 전체적으로는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계층별로 살펴본 〈표 16〉을 보면,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신중계층과 근로계층의 평가가 호의적인 방향으로 비슷하나, 근로계층에서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라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의견의 비율이 많아 근로계층이 신중간계층보다 양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중상계층 및 구중간계층에서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도시하류층은 근로계층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하류층이 가족구성상으로 근로계층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나친 해석은 위험하지만, 조사결과만을 두고 볼 때, 도시적인 계층중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계층은 중상계층이다. 중상계층 중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2.5%에 불과하고, 반면에 ‘자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은 도시적인 계층 중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보인다. 농업계층 중에서는 자영농층과 영세·소작농층이 서로 구분되는데, 자영농층은 ‘필수적이다’와 ‘불가피하다’를 합하여 56.2%인데 반하여, 영세·소작농층은 39.5%에 머문다. 자영농층이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표 16〉 계층별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단위 : %)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계 층						
	중 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도시하류	자영농	영세농
필수적이다	2.5	9.9	7.1	13.0	12.4	12.4	12.6
불가피하다	47.5	54.4	46.1	52.6	51.7	43.8	26.9
자제되어야 한다	40.0	32.0	37.6	27.1	25.8	37.5	42.9
제거되어야 한다	10.0	3.6	9.2	7.3	10.1	6.4	17.6
계 (N)	100.0 (40)	100.0 (384)	100.0 (295)	100.0 (247)	100.0 (89)	100.0 (283)	100.0 (119)
통 계 값	$\chi^2=63.1$, df=18, p<0.001						

대해서 보다 허용적이고 영세농층이 덜 허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관적인 변수인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대적 박탈의식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반면에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좋게 평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집단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집단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거나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응호하는 사람과 반대로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크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강하게 갈리고 있다 하겠다.

이번에는 앞에서 새로이 구성한 변수인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근로자적인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라거나(26.0%) '불가피하다'(60.9%)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반대로 노동운동이 부당한 요구와 과격한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하는 반근로자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자제되어야'(56.4%) 한다거나, '제거되어야'(14.1%)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gamma가 0.6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겠다. 친근로자적인 사람은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 17〉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집단행동의 평가 (단위 : %, N=1,451)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중간적	반근로자적
필수적이다	26.0	10.0	2.0
불가피하다	60.9	56.2	27.5
자제되어야 한다	9.4	28.5	56.4
제거되어야 한다	3.8	5.3	14.1
계 (N)	100.0 (235)	100.0 (751)	100.0 (461)
통계값	$\chi^2=297.9$, df=6, p<0.001; gamma=0.600		

인정하고 있고, 반대로 반근로자적인 사람은 집단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2. 노사분규와 국민생활

앞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아 양분된 평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국민생활과 보다 직결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택시, 버스 파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집단행동을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고 ‘국민의 폐가 되는 집단행동은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그 다음이다.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한다’와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를 합치면 응답자의 3/4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양분되었던 의견이 이번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요구가 대체로 정당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견도 2할이나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이라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20% 정도가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하위집단들이 근로자의 입장은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근로자의 요구가 대체로 정당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견을

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 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20대에서는 근로자를 강력히 응호하는 층이 28.3%로 높은 편이나 40대 이후에는 그 반이 하로 줄어든다. 교육수준별로는,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연령에서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층과 상대적으로 높은 층보다, 중간정도의 층에서 근로자를 응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가 높고, 반대로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가 낮다. 계층별로는 역시 근로계층이 타 계층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다른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15~19% 사이에서 비교적 고르다(〈부표 2〉 참조).

주관적인 변수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중에서 근로자를 강력히 응호하는 사람이 많다. 친근로자적인 사람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일지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람이 45.5%나 되며, 반면에 반근로자적인 사람은 5.2%만이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응호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고, 행동양식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록 그 수에 있어서는 15%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행동양식도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입장장을 강력하게 응호한다는 것이다(〈표 18〉).

〈표 18〉 주관적 변수별 근로자를 강력히 응호하는 사람의 비율 (단위 : %)

하 위 집 단		(N)	옹 호 비 율
상대적 박탈감	하	(500)	14.4
	중	(811)	22.4
	상	(167)	26.5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233)	45.5
	중간적	(751)	21.4
	반근로자적	(459)	5.2
이념적 지향	보수적	(394)	13.6
	중도적	(413)	12.6
	진보적	(670)	28.5

이상의 분석결과는 전체 국민 중에서 학생을 비롯한 젊은층,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자층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층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쟁의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안보에도 해롭다”라는 하나의 진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통하여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자 한다. 이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사람이 11.6%이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사람이 41.9%였다. 두 가지 범주에 대답한 사람은 합하여 53.5%이다. 그러나 앞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 즉, ‘대체로 반대한다’는 사람이 34.7%이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사람도 10.9% 정도이다. 이 결과는 앞서의 결과와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양분된 의견이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소수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응답범주를 ‘찬성’과 ‘반대’로 크게 나누어 ‘찬성’의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쟁의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안보에도 해롭다’는 의견에 더 찬성하게 되는 셈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54%로서, 50% 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정확히 갈리는 수치라 할 때, 의견은 미세하나마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었다는 사실은 하위집단에 따라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이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나 노동쟁의를 보다 관대하게 평가하며, 어떤 집단이 이를 거부하는가?

찬성비율을 통해서 본 하위집단별 노동쟁의에 대한 평가는 월평균가구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동쟁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비판적이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비판적이다. 소득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월소득 2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 노동쟁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직업별로는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 주부, 영세·소작농이 비판적이며, 반대로 학생과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계층별로는 영세·소작농층, 중상계층, 구중간계층의 순서로

노동쟁의에 대해 비판적이다. 반대로 노동쟁의에 우호적인 계층은 신중간계층, 도시하류계층, 근로계층인데, 이중에서 근로계층이 노동쟁의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부표 3〉 참조).

그러면 주관적 변수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적 변수는 노동쟁의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두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그간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노동쟁의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다르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의식을 가장 적게 느끼는 층에서 노동쟁의에 가장 비판적이다. 집단행동이 '필수적이다'라는 사람은 노동쟁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지 않다는 반면, '자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노동쟁의가 사회나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친근로자적인 사람은 노동쟁의가 사회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반근로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사람은 노동쟁의가 사회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그렇

〈표 19〉 주관적 변수별 “노동쟁의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안보에도 해롭다”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단위 : %)

하 위 집 단		(N)	찬 성 비 율
상대적 박탈감***	하	(500)	60.8
	중	(811)	50.8
	상	(167)	49.7
집단행동의 평가***	필 수 적	(153)	33.3
	불 가 피	(708)	44.3
	자 제 되 어 야	(505)	68.7
	제 거 되 어 야	(116)	75.9
노동운동의 평가***	친 근로 자 적	(233)	32.2
	중 간 적	(751)	51.8
	반 근로 자 적	(459)	69.5
이념적 지향***	보 수 적	(394)	68.3
	중 도 적	(413)	57.4
	진 보 적	(670)	43.7

*** 집단간 차의 F검정 결과 $p < 0.001$.

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석상 주의할 점이 있다. 주관적 의식에 따라 노동쟁의를 보는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서로 양극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떠한 주관적 변수에서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쟁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근로자의 집단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민 각 개인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IV. 노사분규의 원인과 쟁점들

1. 노사분규의 원인

(1) 노사분규의 발생원인

노사간의 갈등 및 우리 사회의 기업가와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분규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가의 횡포와 이해부족, 노동조합내부의 문제, 외부세력의 개입 등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업가의 횡포와 이해부족, 외부세력의 개입, 노동조합 내부문제의 순으로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주로 임

<표 20>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한 평가 (단위 : %, N=1,500)

노사분규의 원인	큰 원인이 된 다	어느정도의 원인이 된 다	별로 관계가 없 다	무 응 답	계
임금 및 근로조건	77.3	20.6	1.7	0.4	100.0
기업가의 횡포, 이해부족	53.9	39.7	5.1	1.3	100.0
외부세력의 개입	31.9	46.1	18.7	3.3	100.0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	21.5	56.3	18.1	4.1	100.0

금 및 근로조건, 기업가의 횡포와 이해부족 등 근로자들이 직장내에서 처한 열악한 처지로부터 노사분규가 비롯된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재야단체나 학생세력 등 외부세력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내부의 문제와 같은 노동자들 자신의 문제는 가장 비중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한 이같은 인식을 볼 때, 우리 국민은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노사분규의 원인들에 대한 인식이 하위집단들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요인들에 대한 응답을 ‘노사분규의 큰 원인이 된다’는 100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된다’는 50점, ‘별로 관계가 없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각각의 하위집단들에 대해서 평균점을 계산하였다(<부표 4> 참조).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그밖의 요인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대체로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노사분규의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이 요인의 영향력을 특히 크게 평가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과 근로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

‘기업가의 횡포나 이해부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계층 등 모든 배경변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의 횡포나 이해부족이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이 문제를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근로계층의 순으로 이 요인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흔히 ‘제 3자 개입’으로 거론되는 ‘외부세력에 개입’의 경우는 위의 요인들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인다.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요인을 크게 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수준, 직업 및 계층별로 볼 때는 위의 두 가지 요인들과는 상이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즉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람보다는 초급·전문대학을 다닌 경우에 이 요인을 더욱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가 이 요인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한다. 계층별로는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의 순으로 이 요인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내부문제’가 노사분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위집단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즉 성별이나 연령, 직업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교육수준과 소득, 계층에 따라서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 요인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2) 협상결렬의 주된 책임

노사분규는 임금 또는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근로자나 기업가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협상을 회피하거나 협상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감정적 대립이 고조되어 노사분규의 촉발요인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협상결렬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노사간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주로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책임이 ‘사용자와 근로자측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사용자측에 있다’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노사분규가 근로자나 사용자의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노사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협상결렬의 주된 책임이 주로 ‘근로자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3.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계층 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응답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직업별로는 생산·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자영농·영세·소작농, 그리고 노동·행상 등의 경우에 ‘사용자측의 책임’의 비율이

〈표 21〉 직업집단별 협상결렬의 책임에 대한 평가 (단위 : %)

직업	협상결렬의 주된 책임			계(N)
	사용자측	근로자측	양측모두	
전문·관리직	13.0	4.3	82.6	100.0 (23)
사무직	17.6	1.4	81.0	100.0 (279)
자영업주	22.6	3.6	73.8	100.0 (221)
생산직등	32.0	4.4	63.5	100.0 (181)
노동·행장	32.9	0.0	67.1	100.0 (73)
자영농	32.8	7.0	60.2	100.0 (186)
영세·소작농	33.3	7.8	58.9	100.0 (90)
주부	22.1	2.2	75.7	100.0 (362)
학생	23.5	0.0	76.5	100.0 (34)
기타	22.7	2.3	75.0	100.0 (44)
통계값	$\chi^2=55.6$, df=18, p<0.001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위전문·관리·행정직종사자나 사무직종사자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책임’에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어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표 21〉). 노사간 협상결렬에 대한 평가태도는 계층별로 볼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용자측 책임’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하류층(33.7%), 근로계층(31.2%), 영세·소작농층(3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중상계층, 신중간계층이 여타의 계층에 비해서 ‘양쪽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이어서 상대적 박탈감, 이념적 성향 등
의 주관적 태도변수에 따라서 이 협상결렬의 책임이 달리 인식되고 있다.

〈표 22〉 계층별 협상결렬의 책임에 대한 평가 (단위 : %)

〈표 23〉,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태도변수는 협상결렬의 책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모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대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진적일수록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상대적 박탈감이 작을수록,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보수적일수록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표 23〉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협상결렬의 책임에 대한 평가 (단위 : %)

협상결렬의 주된책임	상 대 적 박 탈 감		
	하	중	상
사용자측	16.9	27.0	39.5
근로자측	3.2	3.4	3.6
양측 모두	80.0	69.5	56.9
계 (N)	100.0 (504)	100.0 (814)	100.0 (167)
통 계 값	$\chi^2=39.3$, df=4, p<0.001		

〈표 24〉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별 협상결렬의 책임에 대한 평가 (단위 : %)

협상결렬의 주된책임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			
	될 수 있	불가피	자제돼야	제거돼야
사용자측	44.4	26.8	17.7	19.7
근로자측	3.9	1.4	4.1	11.1
양측 모두	51.6	71.8	78.1	69.2
계 (N)	100.0 (153)	100.0 (710)	100.0 (508)	100.0 (117)
통 계 값	$\chi^2=77.9$, df=6, p<0.001			

2. 근로조건과 근로자복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노동문제 및 노사갈등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사분규를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제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제 3 자 개입금지’ 등 노사분규에 있어서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여전과 회사사정보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와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보다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대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보다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전체응답자중 “경제여건이나 회사사정보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48.7%이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보다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48.4%이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사회전체의 안정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의견이 같은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근로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룬다.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라는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고 응답자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78.7%,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19.3%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어서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금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회사의 이익금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 중에서 응답자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한 응답자가 전체의 20.1%, 반면에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한 응답자가 77.5%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회사의 이익금도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주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금, 노동시간, 기업내 복지에 관한 조사결과는 현재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관적 태도변수들에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인상문제가 어떻게 달리 평가되고 있는지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우선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 박탈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보다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층, 근로계층, 농민층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태도에 따라서도 근로자의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응호하는 사람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 친근로자적인 사람은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표 25> 주관적 변수별 임금인상에 대한 견해 (단위 : %)

주 관 적 변 수	(N)	근로자의 임금 인상요구 준중
상대적 박탈감**	하	(488) 43.2
	중	(749) 51.3
	상	(166) 65.1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필수적이다	(153) 69.9
	불가피하다	(689) 55.9
	자제되어야 한다	(501) 39.3
	제거되어야 한다	(109) 33.9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230) 70.4
	중간적	(738) 53.4
	반근로자적	(448) 33.9

** χ^2 검정 결과 $p < 0.001$.

3. '무노동 무임금'

최근 정부와 경영자들은 빈발하는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무노동 무임금' (no work, no pay)⁽⁴⁾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은

노동운동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번 조사에서는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5.2%, 반대하는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64.1%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은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 대해 찬성한 사람의 비율을 하위집단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태도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배경변수들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30만원미만의 저소득층과 9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생산·판매·서비스적 근로자들이 이 원칙에 비판적인 입장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전문·관리적 종사자와 영세·소작농은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층별로는 근로계층이 이 원칙에 반대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고, 중상계층은 반대로 매우 강하게 이를 지지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친근로자적인 입장에 설수록 이 원칙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표 27〉).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은 이 원칙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을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하였다기 보다는 ‘약한 자’에 대한 심정적 동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no work, no pay”란 파업기간중의 임금불지급원칙을 의미한다.

〈표 26〉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하 위 집 단		(N)	찬 성 비 율
성 별			
	남 자	(897)	36.1
	여 자	(593)	34.6
연령별 ***	20 대	(362)	20.2
	30 대	(535)	34.0
	40 대	(295)	43.4
	50 대	(228)	46.9
	60 대 이상	(70)	55.7
교육 수준별 ***	국민학교 이하	(267)	46.4
	중 학 교	(299)	36.1
	고등학교	(534)	33.0
	초급·전문대학	(115)	26.1
	대학 이상	(275)	33.1
월평균 가구소득별 **	20만원 미만	(117)	46.2
	20~29만원	(144)	40.3
	30~39만원	(276)	30.8
	40~59만원	(384)	32.6
	60~89만원	(282)	31.9
	90~119만원	(258)	42.4
	120만원 이상	(125)	39.2
직업별 ***	전문·관리적	(23)	52.2
	사무적	(279)	31.5
	자영업주	(220)	45.0
	생산적 등	(181)	24.3
	노동·행상	(73)	26.0
	자영농	(186)	36.0
	영세·소작농	(89)	46.1
	주부	(361)	38.2
	학생	(34)	17.7
	기타	(44)	34.1
계층별 ***	중상계층	(40)	60.0
	신중간계층	(384)	31.3
	구중간계층	(294)	43.9
	근로계층	(247)	24.5
	도시 하류층	(89)	29.2
	자영농층	(283)	35.0
	영세·소작농층	(118)	47.5

** 집단간 차의 F검정 결과 $p < 0.01$.*** 집단간 차의 F검정 결과 $p < 0.001$.

〈표 27〉 주관적 변수별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

주 관 적 변 수		(N)	찬 성 비 율
집 단행동에 대한 평가***	필수적이다	(153)	21.6
	불가피하다	(708)	23.2
	자제되어야한다	(508)	50.4
	제거되어야한다	(117)	63.2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235)	17.4
	중간적	(752)	27.4
	반근로자적	(459)	58.6

*** 집 단간 차의 F검정 결과 $p < 0.001$.

4. ‘제 3 자 개입’

1980년에 새로 신설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 3 자 개입금지는 제 3 자의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고, 또한 사용자측이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지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그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조항의 존폐여부는 노동운동세력과 노동당국간에 대립을 야기시킨 주요한 쟁점이 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재야단체나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재야단체나 해고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50.6%로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도 36.8%에 달한다. 전체응답자의 12.6%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고 있다. 재야단체나 법적으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해고 노동자가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응답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는 개인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겠지만, 대체

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로 보면 제3자 개입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할 가까이 되므로, 이들이 제3자 개입에 대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면, 성별로 제3자 개입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젊은 층일수록 제 3자 개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제 3자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응답자가 26.8%에 지나지 않으나, 30대는 35.9%, 40대는 44.2%, 50대는 42.8%, 그리고 60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40.2%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응답자 가운데 약 1/4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초급·전문대학(59.1%)이 가장 높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이상(43.5%)이 가장 높다. ‘모르겠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이 있다.

계층별로는 근로계층, 영세·소작농층, 자영농층, 신중간계층의 순으로 제3자 개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중상계층의 경우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잘 모르겠다'는 농업계층에서 많이 보

〈표 28〉 계층별 제3자 개입에 대한 태도 (단위 : %)

〈표 29〉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제 3 자 개입에 대한 태도 (단위 : %)

제 3 자 개입에 대한 태도	상 대 적 박 탈 감		
	하	중	상
매우 긍정적	7.7	15.7	25.3
긍정적인 편	35.8	38.3	31.2
부정적인 편	36.4	27.4	17.1
매우 부정적	7.3	7.5	8.2
잘 모르겠다	12.7	11.1	18.2
계 (N)	100.0 (505)	100.0 (814)	100.0 (170)
통 계 값	$\chi^2=57.8$, df=8, p<0.001		

인다(〈표 28〉).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적게 느낄수록, ‘제 3 자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표 29〉).

V. 노동조합의 활동

1.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

(1)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의견

최근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광범위하게 표출되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적당한 활동 영역과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개선,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90.3%),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76.7%),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57.7%),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 참여(36.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0〉).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직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30〉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견해
(단위 : %, N=1,500)

활동영역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	90.3	5.2	4.5	0.1	100.0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	76.7	10.4	12.9	0.1	100.0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	57.7	21.9	19.9	0.5	100.0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	36.6	41.2	21.8	0.4	100.0

산업민주주의로의 발전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문제에 대해서도 6할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나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즉 국민들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기업체내의 문제로 한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동정적인 입장에 서지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활동의 적절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 각 하위집단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에 대하여 ‘바람직하다’에 100점, ‘바람직하지 않다’에 -100점, ‘잘 모르겠다’에 0점을 부여하고 하위집단들의 평균점수를 계산해보았다(〈부표 5〉 참조).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9할 이상의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하위집단별로도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연령과 교육수준, 계층에 따라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젊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의 경우에 특히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계층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신중간계층과 근로계층이 노동조합의 임금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직업, 계층 등 모든 배경변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직장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사무직종사자의 경우에 특히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

이 이러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특히 높고, 그 다음으로 근로계층이 높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성별과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 및 사무직 종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문·관리직종사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계층별로는 근로계층과 신중간계층의 경우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함께 제시된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다. 각각의 응답범주는 하위집단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적을수록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높다 (〈표 31〉).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표 32〉). 즉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국졸이하의 경우에 40.8%나 되

〈표 31〉 연령별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단위 : %)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바람직하다	44.5	40.0	32.3	27.1	22.5
바람직하지 않다	39.5	40.6	42.8	45.4	38.0
잘 모르겠다	16.0	19.4	24.9	27.5	39.4
계 (N)	100.0 (362)	100.0 (535)	100.0 (297)	100.0 (229)	100.0 (71)
통계값	$\chi^2=42.1$, df=8, p<0.001				

〈표 32〉 교육수준별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단위 : %)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교 육 수 준				
	국민 학교 이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문·초급 대	대학교 이상
바람직하다	29.8	33.6	40.6	44.1	38.8
바람직하지 않다	29.4	40.3	42.3	47.4	50.0
잘 모르겠다	40.8	26.2	17.6	11.4	11.2
계 (N)	100.0 (272)	100.0 (298)	100.0 (534)	100.0 (114)	100.0 (276)
통 계 값	$\chi^2=94.0$, df=8, p<0.001				

〈표 33〉 계층별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단위 : %)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계 층						
	중 상	신중간	구중간	근 로	도시 하류	자영농	영세농
바람직하다	25.0	39.3	36.9	42.1	31.5	35.1	32.2
바람직하지 않다	62.5	45.1	43.3	38.5	42.7	36.1	30.6
잘 모르겠다	12.5	15.6	19.8	19.4	25.8	28.8	37.2
계 (N)	100.0 (40)	100.0 (384)	100.0 (293)	100.0 (247)	100.0 (89)	100.0 (285)	100.0 (121)
통 계 값	$\chi^2=46.7$, df=12, p<0.001						

며, 이어서 중학교(26.2%), 고등학교(17.6%), 초급·전문대학(11.4%), 대학교 이상(11.2%)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층별로는 상위의 계층일수록 관심도가 높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표 33〉). 한편 ‘바람직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바람직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계층은 균로계층 뿐이며, 신중간계층은 ‘바람직하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39.3%), ‘바람직하지 않다’(45.1%)에는 못 미치고 있다.

(2) 혁신정당에 대한 태도

그동안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또는 ‘혁신정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혁신’이란 방법여하를

박론하고 현재의 경제사회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이념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물론 ‘보수’, ‘진보’, ‘개혁’, ‘혁신’ 등의 용어는 관점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 조사의 응답자들 모두가 ‘혁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운위되어온 ‘혁신정당추진운동’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지닌 지식의 다양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혁신정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관찰해 볼 만하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볼 때, ‘혁신정당’의 존재는 근로자들의 정치참여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정당문제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참여에 대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혁신정당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대중(주로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혁신정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 응답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3.5%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소극적이나마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30.3%이고, ‘새로운 혁신정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3%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문항은 근자에 실시되었던 다른 국민의식조사에서도 활용되었다. 최근의 다른 조사결과와 이번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혁신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위 : %)

응답범주	조사시기		
	1986년 11월*	1988년 10월**	1989년 1월
필요하다고 본다	40.8	47.4	53.5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38.8	37.8	30.3
새로운 혁신정당은 필요없다고 본다	19.9	14.3	14.3
무응답	0.5	0.9	1.8
계	100.0	100.0	100.0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1986.1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방송정책 조사연구 보고서』, 1989.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혁신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빠르게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에 대중의 민주화요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구정권의 잘못이 날날이 밝혀짐에 따라서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크게 허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만으로 우리 국민이 ‘혁신적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해석은 불가능할 것이다. 던져진 질문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바로는, 응답자들이 ‘혁신정당’에 의미를 부여하였다기보다는 노동자나 농민, 즉 우리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의 출현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조합활동의 영향

노동문제의 해결이 중대한 이유는 노동문제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근로자들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경제성장, 물가안정,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평등화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운동이 더욱 활발해 진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 결과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와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를 포함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회적 평등화(69.8%), 정치적 민주화(61.7%), 경제성장(53.3%), 물가안정(3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와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를 포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회적 평등화(5.7%), 정치적 민주화(11.2%), 경제성장(26.4%), 물가안정(4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운동은 대체로 사회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임금인상→기업생산의 원가상승→물가상승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하위집단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에 100점,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에 50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0점을 부여하고, 부정적 평가인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는 -50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는 -100점을 주어 하위집단들의 평균점수를 계산해보았다(<부표 6> 참조).

노동운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연령, 직업 및 계층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정적으로 본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자영업주가, 그리고 계층별로는 중상계층이 노동운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연령과 계층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저연령층과 60세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중상계층이 노동운동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가,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평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계층 등 모든 배경변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젊은층이,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자가,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사무직종사자가,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3.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활동

최근들어 민주화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금까지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었던 공무원 및 교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되

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무원은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와 “교사는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해보았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금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2%가 찬성, 45.4%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교사의 노동조합활동금지에 대해서는 55.9%가 찬성, 42.6%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고 있지만, 현 행의 노동법대로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그리면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태도가 하위집단별로는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견해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계층 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젊은 연령층보다는 나이든 연령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중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와 농민의 경우에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학생의 찬성비율은 14.7%에 지나지 않아 매우 대조적이다. 계층별로는 중상계층과 농민층이 두드러지게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다(〈부표 7〉 참조).

이어서 주관적 태도변수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35〉에 나타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인다. 근

〈표 35〉 주관적 변수별 ‘공무원노조활동금지’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

주 관 적 변 수	(N)	찬성비율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필수적이다	(153) 39.9
	불가피하다	(702) 43.9
	자제되어야한다	(502) 66.1
	제거되어야한다	(116) 80.2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232) 39.7
	중간적	(748) 49.6
	반근로자적	(456) 68.2

*** 집단간 차의 F검정결과 $p < 0.001$.

〈표 36〉 주관적 변수별 ‘교원노조활동금지’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

주 관 적 변 수	(N)	찬성비율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	필수적이다	(151) 42.4
	불가피하다	(702) 45.7
	자제되어야한다	(504) 70.2
	제거되어야한다	(116) 81.9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231) 39.0
	중간적	(747) 53.8
	반근로자적	(456) 70.8

*** 집단간 차의 F검정결과 $p < 0.001$.

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노동운동을 반근로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도 더욱 높게 나타난다.

교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도 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나이든 세대, 저학력자, 저소득층이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주와 주부의 경우에 ‘교원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학생의 찬성비율은 매우 낮다. 계층별로는 신중간계층과 근로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편이다(〈부표 8〉 참조).

교원노조활동금지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변수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노동운동을 반근로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활동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36〉 참조).

VII. 정부의 정책과 노사관계의 미래

1.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여 노·사·정의 관계이다. 따라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노동정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기 위해서 “귀하는 지금까지 정부가 노동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적절히 대응해 왔다’라는 응답이 19.1%밖에 되지 않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국민이 2할이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 13.9%를 합한다고 해도 33%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2/3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나머지 2/3의 응답이다. 이들은 ‘지나치게 개입했다’(31.1%)와 ‘너무 방관적이다’(35.7%)로 나뉘어 진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다 개입’과 ‘방치’라는 양분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는 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노동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은 어느 집단이며, 그들의 불만은 무엇인가?

하위집단에 따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 변수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르다. 빈도를 보면, 여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고(22.3%),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견(23.3%)이 적다. 그 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너무 방관적이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순빈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줄어든 대신에 ‘지나친 개입’과 ‘너무 방관적’이라는 의견이 늘어나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자보다 크다.

연령별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층일수록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사람의 비율은 일관된 경향은 아니나, 40대이후의 장·노년층에서 높다. ‘너무 방관적’이라는 평가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 37〉은 교육수준별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것인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표 37〉 교육수준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교 육 수 준				
	국 민 학 교 이 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문 · 초급 학	대 학 교 이 상
지나치게 개입	20.1	20.7	32.1	50.4	43.5
적절히 대응	20.9	24.4	20.1	13.0	12.3
너무 방관적	28.6	37.5	37.9	31.3	38.8
잘 모르겠다	30.4	17.4	9.9	5.2	5.4
계 (N)	100.0 (273)	100.0 (299)	100.0 (533)	100.0 (115)	100.0 (276)
통 계 값	$\chi^2=150.7$, df=12, p<0.001				

정부의 노동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30% 정도가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하였다. 둘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노동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적다. 세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에서는 정부정책이 ‘너무 방관적’이라기 보다 ‘지나친 개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급·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지나친 개입’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네째, 정부의 노동정책이 너무 방관적이어서 불만인 사람은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교육수준별로 30%에서 40%정도 존재한다.

직업집단에 따라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르다(〈표 38〉). 먼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여타의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대한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중에서 그 비율이 높아 23.3%이다. 그리고 농민층, 노동·행상 중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다. 이는 이들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고위전문·관리·행정직종사자 중에서 그 비율이 26.1%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주부의 경우도 그 비율이 23.9%로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주부의 경우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 의미를 크게 강조할 수는

〈표 38〉 직업집단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직업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계 (N)
	지나친 개입	적절히 대응	너무 방관적	잘 모르겠다	
전문·관리적	43.5	26.1	26.1	4.3	100.0(23)
사무적	44.1	15.1	35.5	5.4	100.0(279)
자영업주	28.6	19.5	41.8	10.0	100.0(220)
생산적 등	37.0	17.7	34.3	11.0	100.0(181)
노동·행상	24.7	16.4	41.1	17.8	100.0(73)
자영농	31.7	21.5	32.3	14.5	100.0(186)
영세·소작농	28.6	14.3	37.4	19.8	100.0(91)
주부	20.0	23.8	32.9	23.3	100.0(365)
학생	41.2	2.9	50.0	5.9	100.0(34)
기타	29.5	22.7	34.1	13.3	100.0(44)

없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은 집단은 학생인 듯하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에도 불만의 원인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기보다는 양분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갖는 이유로 ‘지나친 개입’을 드는 사람은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사무직 종사자 중에 많고, 반대로 ‘너무 방관적’이라는 평가는 자영업주와 노동·행상에서 많다. 노동정책의 주대상이라 할 수 있는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

계층별로 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직업별로 살펴본 평가와 비슷하다. 자영농층, 영세·소작농층, 도시하류층과 같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으며, ‘지나친 개입’이라는 평가는 고학력층인 신중간계층, 중상계층 등에서 많고, ‘너무 방관적’이라는 평가는 구중간계층, 도시하류층에 많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할 점은 어떠한 하위집단에서도 정부가 노동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응답이 다수인 집단은 없으며, 또한 불만의 방향이 지나친 개입이나 방관 중에서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집단도 없다는 점이다.

이념적 지향에 따라,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경향이 비슷하므로,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39〉를 보면, ‘친근로자적’인 사람중에는 정부가 노동문제

〈표 39〉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친근로자적	중간적	반근로자적
지나치게 개입	41.3	32.5	23.7
적절히 대응	18.7	16.3	24.8
너무 방관적	28.1	36.6	38.6
잘 모르겠다	11.9	14.6	12.9
계 (N)	100.0 (235)	100.0 (754)	100.0 (459)
통 계 값	$\chi^2=33.2$, df=6, p<0.001		

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고, 반면에 ‘반근로자적’인 사람은 너무 방관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노동운동에 중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이 있다기 보다 ‘지나친 개입’과 ‘방관적’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며, 반대로 노동운동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은 정부가 노동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정부가 앞으로 노동문제나 노사분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고 한편에서는 방관적인 입장을 비판한다. 국민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견해가 양분되었듯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성원에 따라 의견과 평가가 다양한 문제에 임했을 때,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하나?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한 단서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때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50.7%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반정도의 응답자는 다시 둘로 나뉘어져 24.9%가 ‘노사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23.5%가 ‘기업가와 근로자가 끝까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최일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노사분규 발생의 원인이나,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노사분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양측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급적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규나 노사 쟁방의 자율적인 해결가능성이 없는 분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알선·중재나 조정이 요청된다 하겠다.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하위집단별로 상이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 보았는데, 이번에도 하위집단별로 정부의 노사분규에의 개입 양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부표 9〉 참조). 성별로는 정부의 노사분규개입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다른 변수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별적인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 다수인 가운데, 연령별로는 젊은층에서 노사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은 층일수록 정부의 전면개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수준별로는 낮은 학력층에서 정부의 전면개입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많다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별개입에 대한 의견이 늘어나는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에서는 선별개입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다. 소득수준별로도 교육수준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다른 층에서보다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직업별로는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종사자 중에서 노사분규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로 선별적인 개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생산·판매·서비스직 근로자중에서 정부의 선별개입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사분규의 자율적 해결에 기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직업집단보다 높다. 정부의 전면적인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집단은 주부라고 할 수 있다. 직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계층별로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상계층 중에서는 노사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전적인 개입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선별적인 개입을 기대한다. 근로계층과 도시하류층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며, 영세·소작농층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상의 결과는 그동안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상당수의 근로계층에게는 좋지 않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하겠다.

2. 노사관계의 전망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이 앞으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리라 생각하는지 살펴보면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하자.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타협과 공존을 찾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3.7%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국민이 2/3정도에 이른다. 반면에 ‘거리감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는 9.5%로 1할이 되지 못한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중간적인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가 15.5%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보아 나쁘다고 생각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표명과 마찬가지로 노사분규의 발생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5%이고, ‘약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5.3%이어서, 이를 합하면 63.8%의 응답자가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이에 반하여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은 14.8%에 불과하다.

노사관계나 노사분규의 전망에 대한 견해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40〉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과 노사분규에 대한 전망을 서로 교차시키었다. 표를 보면, 앞으로 노사관계가 ‘타협과 공존을 찾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의 8할이 노사분규가 크게 줄거나 약간 줄어든다고 예상한다. 반면에 ‘거리감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6%로 다수이고, ‘노사분규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사람은 3할 남짓이다. 한편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노사분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고, 노사관계의 장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 사람중에는 노사분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앞으로의 노사분규에 관해서도

〈표 40〉 노사관계와 노사분규에 대한 전망 (단위 : %)

노사분규에 대한 전망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타협과 공존	갈등·거리감 심화	큰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크게 줄어든다	25.8	8.5	3.9	7.4
약간 줄어든다	53.4	23.2	32.9	42.6
마찬가지이다	10.4	27.5	46.8	31.8
늘어날 것이다	10.4	40.8	16.5	18.2
계 (N)	100.0 (951)	100.0 (142)	100.0 (231)	100.0 (148)
통 계 값	$\chi^2=325.0$, df=9, p<0.001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하겠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노사분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하위집단별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살펴볼 때,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지만,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남자가 다소 많은 것을 고려하면, 성별 차이는 근본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면 젊은 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층,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 낙관적 의견이 많으나, 비관적 견해를 갖는 사람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듯하다. 직업별로 보면,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인 집단은 고위전문·관리·행정직, 사무직 종사자이다. 계층별로는 중상계층, 신중간계층에서 낙관적 견해가 많고 영세·소작농층에서 적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각 하위집단별로 10% 내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하위집단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다르지만 이들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중도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면, 각계각층에서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적은 비율이라 하겠다(〈부표 10〉 참조).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기준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노사관계의 전망을 낙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부가

〈표 41〉 노사관계의 전망과 정부의 기존 노동정책 (단위 : %)

정부의 기존 노동 정책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타협과 공존	갈등·거리감 심화	큰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지나친 개입	35.4	31.0	25.0	15.8
적절히 대응	20.3	12.0	22.8	13.3
너무 방관적	33.3	52.8	37.9	32.7
모르겠다	11.0	4.2	14.2	38.2
계 (N)	100.0 (955)	100.0 (142)	100.0 (232)	100.0 (165)
통 계 값	$\chi^2=129.4$, df=9, p<0.001			

〈표 42〉 노사관계의 전망과 정부의 노동문제 개입 (단위 : %)

정부의 노동문제 개 입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타협과 공존	갈등·거리감 심화	큰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전면 개입	23.1	32.9	22.5	33.7
선별 개입	53.5	39.9	50.6	48.5
자율적 개입	23.4	27.3	26.8	17.8
계 (N)	100.0 (949)	100.0 (143)	100.0 (231)	100.0 (163)
통 계 값	$\chi^2=19.5$, df=6, p<0.01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견이 많고, 갈등과 거리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1/2정도가 그동안의 노동정책이 너무 방관적이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 중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눈에 띈다(〈표 41〉).

앞에서 기존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노사분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표 42〉).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53.5%가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인 개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비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중에서는 정부가 노사분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노사분규에 적

극 개입하는 것이나, 노사쌍방이 끝까지 자율적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도록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즉 노사관계 그리고 노사분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낙관적 전망은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한 규명, 노사분규시에 쟁점이 되는 여러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동조합의 활성화, 정부의 적절한 노동정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VII.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연구는 노동문제 및 노사간의 갈등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노동문제에 접근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시사받을 수 있겠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과 인지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노사분규의 사례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법죄나 빙부격차와 같은 여타의 사회문제와 비교할 때, 노사분규를 포함한 노동문제의 심각성은 전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응답자의 성별, 직업, 계층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근로자의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집단행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과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집단행동이 때로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즉 근로자들의 행동방식이 과격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하겠다. 노동쟁의가 사회안정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으로 갈리고 있다. 신중간계층, 근로계

충, 도시하류층 등 주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집단이 노동쟁의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정도가 자체되거나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과 생산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자의 입장은 강하게 응호하는 층이 꽤넓게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분규의 배경과 원인 :근로자와 기업가 사이에 거리감과 갈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할 가까이 된다. 최근 2~3년간에 실시되었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민들이 노사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인식해가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여도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 및 간부층은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왔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공장근로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업가들로부터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가의 횡포, 이해부족, 외부세력의 개입, 노동조합 내부 문제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협상결렬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책임의 소재가 사용자측에 주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4 정도가 되는 반면, 근로자측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근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동정적이다. 특히 젊을수록, 친근로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록,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허용적일수록 그러하다.

노사분규를 둘러싼 쟁점들 :근로자 복지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와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은 모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하며, 회사의 이익금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원칙에 대한 태도는 하위집단별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원칙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중상계층에 있어서는 지지경향이 강하다.

‘제 3자 개입’, 즉 제야단체나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약간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견해가 대체로 양쪽으로 갈려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상당히 많다.

노동조합의 활동 :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90%),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77%),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력(58%), 사회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37%)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직장의 민주화를 위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더 많다. 물가안정문제를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 사회적 평등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나 노동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및 계층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약간 더 강하다.

정부의 정책과 노사관계의 전망 : 지금까지 노동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국민은 2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균형있게 대응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노사분규시 정부가 무조건 적극 개입하거나, 또는 끝까지 자율에 맡긴다는 식의 획일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노사분규 발생의 원인, 노사분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율에 맡길 것은 맡기면서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2/3는 노사관계나 노사분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염두에 둘 때, 노동문제에 대한 이러한 낙관은 노사분규 원인의 제거, 노사분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해결, 노동조합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적절한 정부정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모든 응답자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깊이 알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사연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는 노사관계의 위상을 어느 정도 그려보았다고 생각된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사결과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몇몇 주요 쟁점에 대해 응답자들의 견해가 두 갈래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일부 현상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여러 하위집단들간에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사갈등은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수단과 논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국민들이 다소 방관자적 입장에서 노사문제를 바라보고는 있으나 이들의 눈은 매우 정직하고 또한 정확한 듯이 보인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모두를 지배할 수는 없으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중재·조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나 정책 당국자 모두는 국민들의 소박한 견해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세겨보아야 할 것이다.

〈부표〉 하위집단별 응답유형

〈부표 1〉 노사분규 인지도

하 위 집 단		(N)	평 균	평균과의 차
전 체 평 균		(1,416)	52.67	
성 별**	남 자	(859)	58.32	+5.65
	여 자	(557)	43.95	-8.72
연령별*	20 대	(350)	56.71	+4.04
	30 대	(517)	57.36	+4.69
	40 대	(284)	48.68	-3.99
	50 대	(207)	43.30	-9.37
	60 대이상	(58)	39.44	-13.23
교육수준별**	국민학교 이하	(244)	32.84	-19.83
	중 학 교	(287)	45.95	- 6.72
	고등학교	(507)	56.86	+ 4.19
	초급·전문대학	(110)	58.53	+ 5.86
	대학교 이상	(268)	67.59	+14.92
월평균가구 소득별*	20만원 미만	(107)	35.17	-17.50
	29~29만원	(137)	41.15	-11.52
	30~39만원	(262)	49.96	- 2.71
	40~59만원	(360)	54.83	+ 2.16
	60~89만원	(278)	55.90	+ 3.23
	90~119만원	(150)	59.76	+ 7.09
	220만원 이상	(122)	64.35	+11.68
직업별	전문·관리적	(23)	71.20	+18.53
	사 무 적	(272)	63.84	+11.17
	자영업주	(212)	55.90	+ 3.23
	생산적 등	(179)	56.71	+ 4.04
	노동·행상	(69)	48.01	- 4.66
	자 영 농	(182)	47.74	- 4.93
	영 세 · 소작농	(86)	40.41	-12.26
	주 부	(337)	43.48	- 9.19
	학 생	(31)	62.10	+ 9.43
	기 타	(25)	61.01	+ 8.34
계 총 별	증상계층	(39)	64.43	+11.76
	신증간계층	(375)	61.11	+ 8.44
	구증간계층	(286)	54.77	+ 2.10
	근로계층	(243)	55.05	+ 2.38
	도시하류층	(85)	45.89	- 6.78
	자영농층	(274)	43.53	- 9.14
	영세 · 소작농층	(114)	37.61	-15.06

* 집단간 차의 F검정에 따른 유의도 $p<0.01$, ** $p<0.001$.

〈부표 2〉 근로자를 강력히 응호하는 사람의 비율 (단위 : %)

하 위 집 단		(N)	응 호 비 율
전 체		(1,487)	54.0
성 별*	남 자	(900)	20.4
	여 자	(599)	19.5
연 령 별 **	20 대	(361)	28.3
	30 대	(536)	23.3
	40 대	(297)	10.8
	50 대	(233)	13.7
	60대 이상	(72)	13.9
교 육 수 준 별**	국민학교 이하	(276)	18.1
	중 학 교	(299)	17.4
	고등학교	(534)	22.1
	초급·전문대학	(115)	19.1
	대학교 이상	(275)	21.5
월 평균가구소득 별**	20만원 미만	(120)	13.3
	20~29만원	(147)	23.8
	30~39만원	(276)	21.4
	40~59만원	(385)	23.9
	60~89만원	(282)	18.8
	90~119만원	(158)	14.6
	120만원 이상	(125)	18.4
직업 별**	전문·관리적	(23)	8.2
	사 무 적	(279)	18.3
	자영업주	(221)	18.1
	생 산 적 등	(181)	32.6
	노동·행 상	(73)	13.7
	자 영 농	(187)	20.3
	영 세·소작농	(91)	14.3
	주 부	(366)	17.8
	학 생	(33)	36.4
	기 타	(45)	24.4
계 총 별**	중상계층	(40)	15.0
	신중간계층	(384)	18.5
	구중간계층	(296)	17.9
	근로계층	(247)	32.8
	도시 하류층	(89)	15.7
	자영 농층	(286)	17.8
	영 세·소작농층	(121)	17.4

주 : 응답범주를 〈참고 견디야 한다〉,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한다〉,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였을 경우 χ^2 검정 결과 * $p < 0.01$, ** $p < 0.001$.

〈부표 3〉 “노동쟁의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안보에도 해롭다”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
(단위 : %)

하 위 집 단		(N)	찬 성 비 율
전 체		(1,487)	54.0
성 별 *	남 자	(897)	51.6
	여 자	(590)	57.6
연 령 별 ***	20 대	(361)	39.9
	30 대	(533)	51.2
	40 대	(296)	62.5
	50 대	(227)	66.5
	60 대 이상	(70)	71.4
교 육 수준 별***	국민학교 이하	(267)	63.3
	중 학 교	(298)	60.1
	고등학교	(532)	50.6
	초급·전문대학	(115)	45.2
	대학교 이상	(275)	48.7
월평균가구소득별	20만원 미만	(116)	64.7
	20~29만원	(146)	54.8
	30~39만원	(273)	54.2
	40~59만원	(384)	50.5
	60~89만원	(283)	55.5
	90~119만원	(157)	54.8
	120만원 이상	(125)	48.8
직업별***	전문·관리직	(23)	65.2
	사무직	(278)	47.5
	자영업주	(221)	60.6
	생산직 등	(181)	44.2
	노동·행상	(73)	49.3
	자영농	(186)	52.1
	영세·소작농	(89)	60.7
	주부	(358)	62.0
	학생	(34)	23.5
	기타	(44)	56.8
계 층 별 **	증상계층	(40)	60.0
	신증간계층	(383)	49.3
	구증간계층	(295)	61.4
	근로계층	(247)	46.1
	도시하류층	(88)	50.0
	자영농층	(283)	55.5
	영세·소작농층	(117)	60.7

* 집단간 차의 F 검정 결과 $p < 0.05$,** $p < 0.01$,*** < 0.001 .

〈부표 4〉 노사분규의 원인에 대한 평가점수 (N=1,500)

하 위 점 단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가 회포 이래부족	외부세력 의 개입	노동조합 내부문제
전 체 평 균		87.9	74.7	56.9	51.7
성 별	남 자	87.8	77.3***	59.4***	51.8
	여 자	87.9	70.6	52.8	51.6
연 령 별	20 대	94.0***	78.5***	57.0**	50.5
	30 대	87.5	78.0	60.0	54.0
연 령 별	40 대	83.6	69.4	54.4	52.1
	50 대	85.6	68.2	56.4	50.2
연 령 별	60 대 이상	84.5	71.4	41.5	43.5
교육수준별	국민학교 이하	82.7***	61.2***	47.1***	45.2***
	중학교	86.5	71.0	54.2	47.7
	고등학교	88.0	77.7	58.4	54.9
	초급·전문대학	90.0	80.8	65.2	53.9
	대학교 이상	93.2	82.9	61.6	54.9
월평균가구 소득별	20만원 미만	86.0*	67.5***	44.4**	46.7
	20~29만원	86.2	69.0	55.0	43.8
	30~39만원	85.0	71.7	56.4	54.5
	40~59만원	88.0	77.2	56.8	50.8
	60~89만원	89.7	76.1	57.6	51.6
	90~119만원	88.2	80.0	60.6	54.4
	120만원 이상	92.8	76.8	64.8	59.7
직업별	전문·관리직	84.7**	71.7***	65.2*	54.3
	사무직	91.2	81.8	60.5	54.6
	자영업주	88.2	75.5	60.7	54.3
	생산직 등	89.2	79.4	59.0	51.3
	노동·행상	87.3	71.2	52.0	50.0
	자영농	84.2	73.5	55.2	47.1
	영세·소작농	85.7	64.4	50.6	44.4
	주 부	86.0	69.5	52.1	52.5
	학 생	98.5	83.8	67.6	52.9
	기 타	90.0	72.2	55.5	48.8
계 층 별	중상계층	85.0**	72.5***	60.0**	52.5**
	신중간계층	91.5	81.3	60.6	54.0
	구중간계층	87.3	76.5	60.0	55.0
	근로계층	89.0	78.1	57.8	52.8
	도시하류층	87.3	69.6	51.6	50.5
	자영농층	84.8	69.1	51.5	46.7
	영세·소작농층	84.5	60.1	49.0	43.9

주 : <큰 원인이 된다>에 100점, <어느정도의 원인이 된다>에 50점, 그리고 <별로 관계가 없다>에 0점을 주어 평균을 낸 수치임.

* 집단간 차의 F 검정결과 p<0.05, ** p<0.01, *** p<0.001.

〈부표 5〉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대한 평가태도점수* (N=1,500)

하 위 집 단		임금·근로 조건개선	직 민 주 장 화	경영참가	정 치 참여
성 별	전 체 평 균	85.1	66.3	36.0	- 4.6
	남 자	85.1	69.2*	34.1	- 9.3**
연 령 별	여 자	85.1	61.9	38.8	2.5
	20 대	95.8***	79.0***	50.9***	4.9**
	30 대	86.5	69.9	37.5	- 0.5
	40 대	81.1	59.9	33.1	-10.4
	50 대	73.7	52.1	18.6	-18.3
교육수준별	60 대이상	73.6	47.2	16.9	-15.4
	국민학교 이하	72.3***	44.0***	23.8**	0.3
	중 학 교	82.9	59.5	27.5	- 6.7
	고등학교	87.4	70.4	42.4	- 2.2
	초급·전문대학	90.4	73.9	35.0	- 6.1
월평균가구 소 득 별	대학교 이상	93.4	84.7	45.4	-11.2
	20만원 미만	80.0	50.8***	24.1	- 8.3
	20~29만원	85.6	47.2	24.8	- 1.3
	30~39만원	82.6	69.2	40.0	1.8
	40~59만원	84.1	69.6	42.0	2.8
	60~89만원	86.2	69.6	40.7	-16.9
	90~119만원	87.9	74.6	33.5	- 7.5
직업별	120만원 이상	94.4	68.8	25.6	-12.0
	전문·관리적	86.9	73.9***	- 8.6**	-39.1
	사무적	91.3	85.6	45.5	- 7.1
	자영업주	82.8	66.5	24.5	-13.7
	생산직 등	88.9	75.1	46.6	6.0
	노동·행사	79.4	63.0	23.6	- 6.8
	자영농	83.9	52.9	31.1	- 8.0
	영세·소작농	79.1	52.7	30.7	- 3.2
	주 부	81.0	56.1	38.3	0.8
	학 생	100.0	94.1	51.5	8.8
계 층 별	기 타	88.8	55.5	34.0	- 9.0
	중상계층	85.0*	60.0***	15.0**	-37.5
	신중간계층	91.4	83.8	46.0	- 5.7
	구중간계층	83.1	64.1	29.1	- 6.4
	근로계층	90.6	75.7	47.5	3.6
	도시 하류층	82.0	59.5	25.0	-11.2
	자영농층	81.1	50.0	30.6	- 1.0
	영세·소작농층	78.5	43.8	26.4	1.6

주 : <바람직하다>에 100점, <바람직하지 않다>에 -100점, <잘 모르겠다>에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임.

* 집단간 차의 F검정 결과 p<0.05, ** p<0.01, *** p<0.001.

〈부표 6〉 노동조합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태도점수 (N=1,500)

하 위 집 단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 민 주 적화	사 회 평 등화
성 별	전 체 평 균	22.0	- 1.7	36.7	47.2
	남 자	23.1	- 1.7	40.5***	50.6***
연 령 별	여 자	20.2	- 1.5	31.0	42.0
	20 대	34.6***	7.3*	46.6***	57.5***
	30 대	21.3	- 4.6	40.8	50.8
	40 대	15.8	- 5.4	28.8	38.5
	50 대	14.4	- 4.7	21.9	38.4
	60대 이상	11.9	0.7	35.9	30.9
교 육 수 준 별	국민학교 이하	13.8	- 0.7***	23.7***	34.2
	중 학 교	20.4	- 4.0	32.0	40.1
	고등학교	25.6	- 2.7	37.2	47.2
	초급·전문대학	29.1	1.7	45.2	60.8
	대학교 이상	21.6	0.5	50.0	61.8
월 평 균 가 구 소 득 별	20만원 미만	12.0	0.0	28.1***	32.9
	20~29만원	19.4	- 4.1	34.8	48.2
	30~39만원	20.9	- 2.9	32.9	40.9
	40~59만원	25.0	- 2.7	35.5	44.7
	60~89만원	22.9	- 0.8	39.2	51.7
	90~119만원	26.5	3.4	42.7	56.6
	120만원 이상	19.6	- 3.6	46.0	58.8
직 업 별	전문·관리적	-21.7*	-34.7	26.0***	30.4**
	사 무 적	23.4	0.8	50.8	63.3
	자영업주	17.0	- 3.8	35.9	47.0
	생 산 적 등	27.3	- 0.5	40.0	48.0
	노동·행상	18.4	- 4.8	30.8	45.8
	차 영 농	22.7	- 5.3	30.0	40.8
	영 세 · 소 차 농	31.1	12.2	33.3	41.1
	주 부	21.0	- 3.8	27.9	37.6
	학 생	14.7	- 2.9	54.4	64.7
	기 타	34.0	17.0	46.5	57.9
계 층 별	중상계층	- 8.7**	-21.2	31.2**	38.7***
	신중간계층	21.7	0.2	46.0	57.0
	구중간계층	18.8	- 3.0	35.9	48.4
	근로계층	31.7	1.2	37.4	45.1
	도시하류층	21.3	- 3.9	31.4	45.5
	자영농층	22.0	- 5.2	29.2	39.8
	영 세 · 소 차 농 층	26.2	8.7	31.9	39.1

주 :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에 100점,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에 50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0점,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 -50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 -100점을 주어 평균값을 구한 것임.

* 집단간 차의 F검정결과 p<0.05, ** p<0.01, *** p<0.001.

〈부표 7〉 ‘공무원노조활동금지’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

하 위 접 단		(N)	찬 성 비 율
성 별	남 자 여 자	(894) (584)	52.7 55.8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359) (530) (294) (225) (70)	37.0 52.1 61.2 71.1 68.6
교 육 수준 별***	국민학교 이하 중 학 교 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대학교 이상	(265) (293) (531) (115) (274)	67.2 61.1 53.7 39.1 40.1
월 평균가구소득별**	20만원 미만 20~29만원 30~39만원 40~59만원 60~89만원 90~119만원 120만원 이상	(117) (142) (274) (379) (280) (157) (125)	66.7 56.3 58.4 51.7 54.3 45.9 46.4
직업별***	전문·관리적 사무적 자영업주 생산적 등 노동·행상 자영농 영세·소작농 주부 학생 기타	(23) (278) (216) (180) (73) (184) (89) (357) (34) (44)	65.2 39.9 58.3 48.9 53.4 62.0 67.4 60.8 14.7 50.0
계 총 별***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근로계층 도시 하류층 자영농층 영세·소작농층	(40) (383) (290) (246) (89) (278) (118)	65.0 42.3 58.3 49.6 56.2 61.9 65.3

접단간 차의 F검정결과 $p < 0.01$, * $p < 0.001$.

〈부표 8〉 '교원노조활동금지'에 대한 찬성비율 (단위 : %)

하 위 접 단		(N)	찬 성 비 율
성 별**	남 자 여 자	(892) (586)	53.6 61.4
연 령 별***	20 대	(361)	39.6
	30 대	(532)	53.9
	40 대	(291)	68.7
	50 대	(224)	71.9
	60 대 이상	(70)	67.0
교 육 수 준 별***	국민학교 이하	(264)	67.1
	중 학 교	(295)	67.5
	고등학교	(529)	55.2
	초급·전문대학	(115)	43.5
	대학교 이상	(275)	43.6
월 평균가구소득별**	20만원 미만	(118)	65.3
	20~29만원	(144)	63.2
	30~39만원	(270)	59.3
	40~59만원	(380)	54.7
	60~89만원	(281)	58.7
	90~119만원	(157)	51.0
	120만원 이상	(124)	44.4
직업별***	전문·관리적	(23)	56.5
	사무적	(278)	41.4
	자영업주	(217)	66.8
	생산적 등	(180)	49.4
	노동·행상	(73)	65.8
	자영농	(186)	59.1
	영세·소작농	(88)	61.4
	주부	(356)	66.3
	학생	(34)	17.7
계 총 별***	기타	(43)	51.2
	중상계층	(40)	60.0
	신중간계층	(381)	44.1
	구중간계층	(290)	65.9
	근로계층	(246)	53.3
	도시하류층	(89)	65.2
	자영농층	(280)	62.1
	영세·소작농층	(118)	63.6

** 접 단간 차의 F 검정 결과 $p < 0.01$,*** $p < 0.001$.

〈부표 9〉 정부의 노사분규 개입에 대한 의견 (단위 : %)

하 위 접 단		(N)	전면개입	선별개입	자율적 해결
성 별	남 자 여 자	(897) (589)	23.7 27.2	52.4 49.4	23.9 23.4
연령별*	20 대	(362)	21.8	53.9	24.3
	30 대	(535)	21.7	52.1	26.2
	40 대	(294)	29.3	48.0	22.8
	50 대	(224)	29.9	51.3	18.8
	60 대 이상	(71)	35.2	43.7	21.1
교육수준별***	국민학교 이하	(267)	36.0	41.2	22.8
	중 학 교	(297)	24.6	51.9	23.6
	고등학교	(532)	22.4	49.8	27.8
	초급·전문대학	(115)	24.3	53.9	21.7
	대학교 이상	(275)	20.7	61.8	17.5
월평균가구 소득별***	20만원 미만	(118)	32.2	44.1	23.7
	20~29만원	(141)	30.5	42.6	27.0
	30~39만원	(272)	26.5	46.7	26.8
	40~59만원	(385)	21.3	51.2	27.5
	60~89만원	(283)	25.8	54.8	19.4
직업별***	90~119만원	(158)	25.3	58.9	15.8
	120만원 이상	(125)	20.0	58.4	21.6
	전문·관리적	(23)	26.1	73.9	0.0
	사무적	(279)	22.9	58.8	18.3
	자영업주	(219)	28.3	53.9	17.8
계층별***	생산적 등	(180)	24.4	40.6	35.0
	노동·행상	(73)	20.5	50.7	28.8
	자영농	(185)	20.0	53.5	26.5
	영세·소작농	(91)	35.2	35.2	29.7
	주부	(358)	26.0	49.2	24.9
	학생	(34)	32.4	47.1	20.6
	기타	(44)	20.5	65.9	13.6
	중상계층	(40)	22.5	70.0	7.5
	신중간계층	(384)	21.4	57.8	20.8
	구중간계층	(294)	27.2	55.4	17.3
	근로계층	(246)	26.8	40.7	32.5
	도시하류층	(89)	22.5	44.9	32.6
	자영농층	(279)	22.2	53.0	24.7
	영세·소작농층	(119)	37.0	34.5	28.6

* χ^2 검정 결과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10〉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단위 : %)

하 위 접 단		(N)	타협과 공존	거리감· 갈등 심화
성 별***	남 자	(900)	67.9	10.3
	여 자	(597)	57.8	8.4
연 령 별**	20 대	(362)	67.4	7.7
	30 대	(536)	64.9	10.3
	40 대	(297)	62.3	7.7
	50 대	(231)	58.9	13.9
	60 대 이상	(71)	60.6	7.0
교 육 수 준 별***	국민학교 이하	(273)	47.3	10.3
	중 학 교	(299)	62.5	9.0
	고등학교	(534)	66.5	10.1
	초급·전문대학	(115)	67.0	9.6
	대학교 이상	(276)	75.4	8.3
월평균가구소득별***	20만원 미만	(119)	49.6	8.4
	20~29만원	(149)	59.6	8.9
	30~39만원	(276)	58.0	11.6
	40~59만원	(385)	64.9	9.1
	60~89만원	(283)	66.8	8.8
	90~119만원	(158)	77.8	7.0
	120만원 이상	(125)	68.0	13.6
직 업 별***	전문·관리직	(23)	82.6	8.7
	사 무 직	(279)	73.5	7.9
	자영업주	(221)	69.2	10.9
	생산직 등	(181)	65.2	10.5
	노동·행상	(73)	58.9	11.0
	자 영 농	(187)	58.3	10.2
	영 세 · 소작농	(91)	47.3	9.9
	주 부	(363)	57.9	8.8
	학 생	(34)	64.7	5.9
	기 타	(45)	75.6	13.3
계 층 별***	중상계층	(40)	80.0	12.5
	신중간계층	(384)	71.6	7.3
	구중간계층	(296)	66.2	10.5
	근로계층	(247)	64.0	10.9
	도시 하류층	(89)	57.3	10.1
	자영농층	(285)	57.5	9.8
	영 세 · 소작농층	(120)	45.0	8.3

주 : <큰 차이가 없다>와 <모르겠다>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합이 100에 크게 못 미침.

** 응답범주를 <타협과 공존을 찾을 것이다>, <거리감과 갈등이 심화된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였을 경우 χ^2 검정결과, $p<0.01$.*** $p<0.001$.